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차

1. 돌봄의 환경분석 - 사회보장급여로서 돌봄 공백
2. 공공 돌봄을 위한 뉴딜이 필요하다
3. 공공 돌봄 : 지역사회 공동체 플랫폼 관리책임자

Part 1. 돌봄의 환경분석



1. 돌봄의 수요

인구고령화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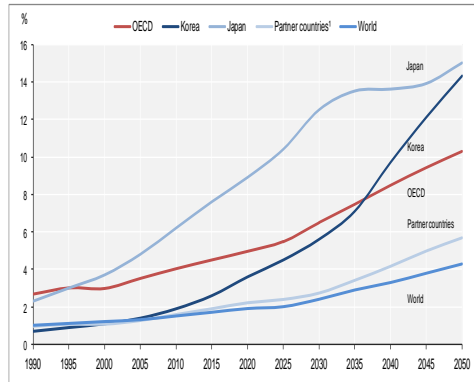
- 2018년 14.3%
- 2050년 38.1%
- 2060년 41.1%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2015년 2.4%
- 2050년 14.3%

기대수명 82.7세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 더 길다(OEC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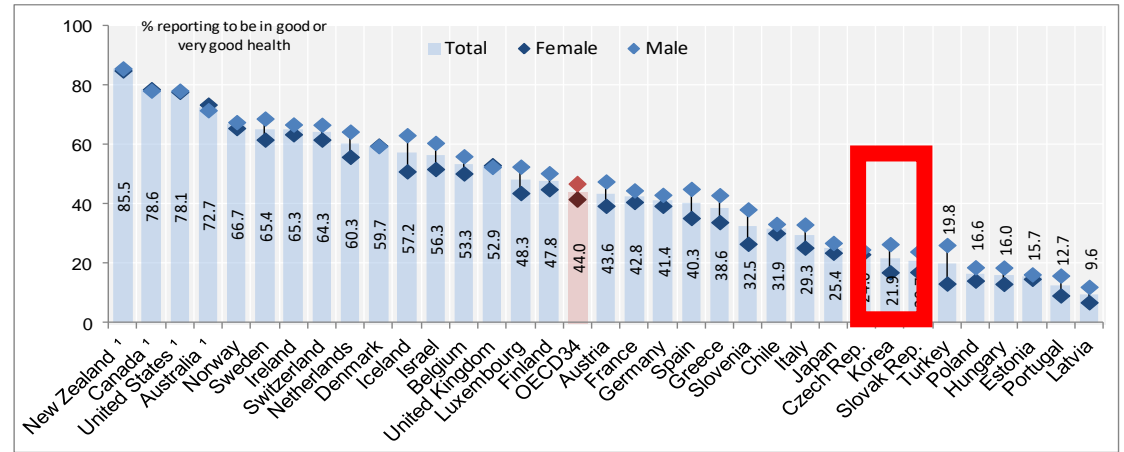
인구 중 80세 이상 비중



Source: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Database, 2017.

돌봄 부담

노인인구 중 건강한 노인 비중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7.

문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2016년 건강수명 남성 64.7세, 여성은 65.2세
 (스웨덴 남성 81세, 여성 82세, OECD 평균 74.3세)
 건강한 노인 비율은 21.9% (OECD 평균 44%)
 즉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약 17년의 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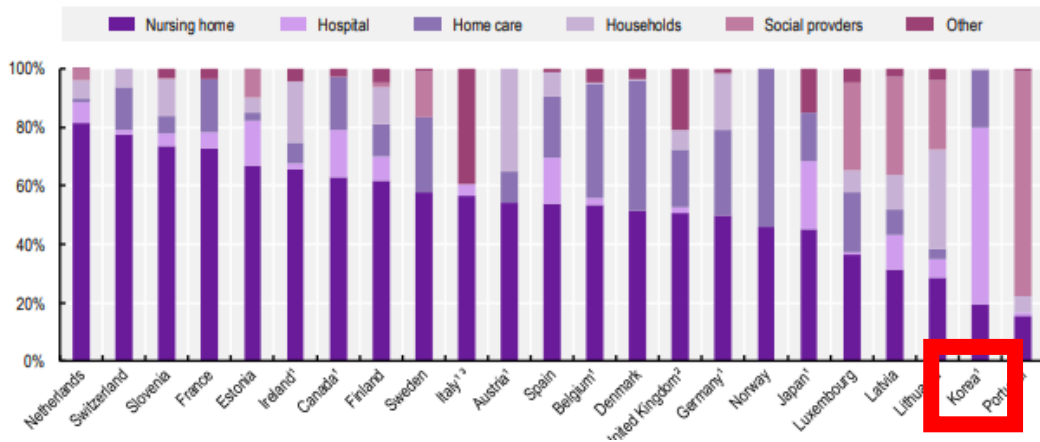
2. 돌봄의 공급

지속가능한 재정?

- 장기요양 이용자 수는 13.9%, 한국은 8.9%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공적 지출 수준은 GDP의 0.8%로 OECD 평균 1.5%에 한참 낮은 수준
- 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2022년 기금 고갈 예상
- 건강보험: 요양병원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기

장기요양 비용 (시설과 병원)

Figure 3. Total long-term care spending broken down by provider, 2018 (or nearest year)



장기요양 수급자 비중 & 공공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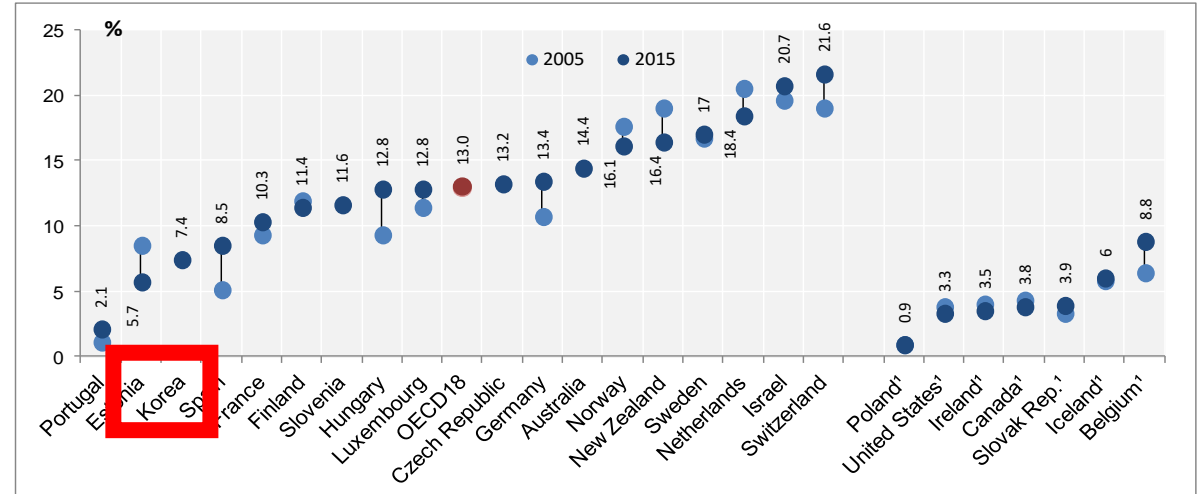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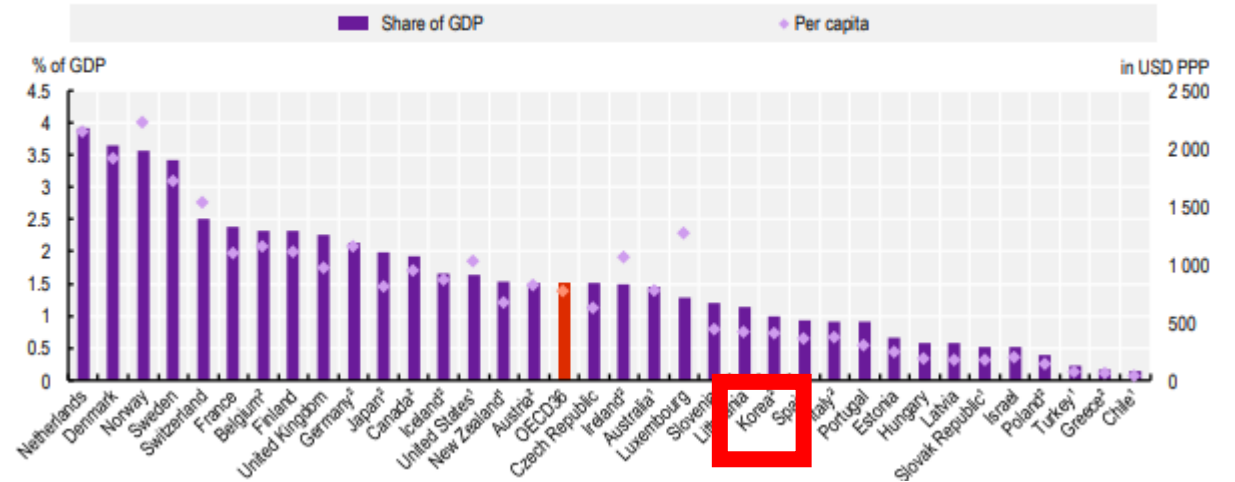


Figure 1. Total LTC expenditure as share of GDP and per capita, 2018 (or neare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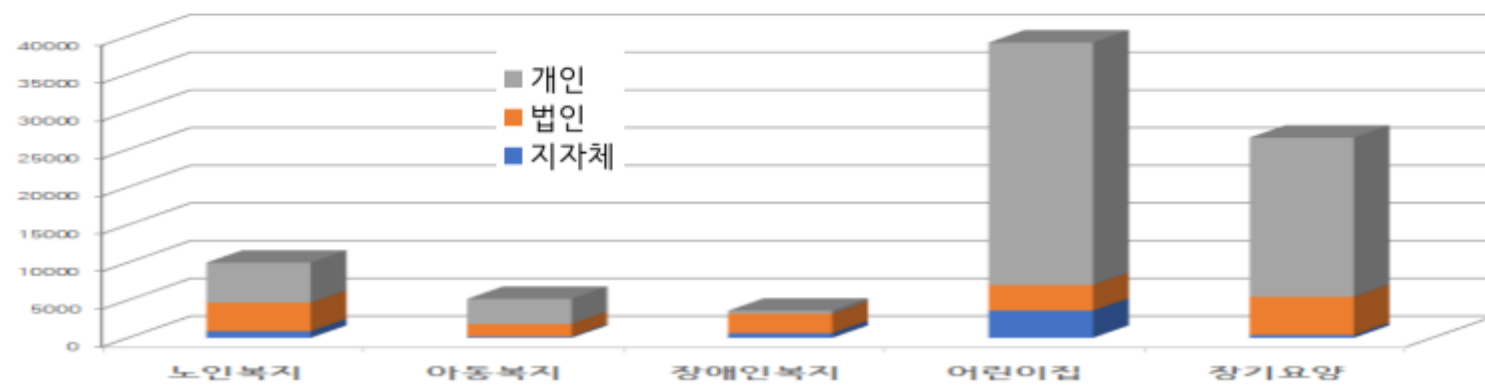


3-1. 어떤 돌봄에 주목해야 하는가?

'50 '60 '70 '80 '90 '00 '10 '20

생활시설보호 : 최소한의 무의탁빈민 **지역사회복지기관 : 취약층 복지지원**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도화**

아동양육시설	873	사회복지관	468	어린이집	37,371
장애인거주시설	1,557	노인복지관	391	장기요양시설	5,543
노인양로시설	232	장애인복지관	254	장기요양재가	19,410
노숙인시설	112	장애인주간보호	769		
결핵맞이한센	6	지역아동센터	4,211		



출처: 양난주 (2021)

3-2. 어떤 돌봄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나의 이름, 다른 대상, 다른 사업

돌봄 서비스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양

1.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 영역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

2. 범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240개) 사업 중

- 아동돌봄, 성인돌봄, 신체건강 등 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 사업의 상당한 비중
- 돌봄의 지원방식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상당수가 이용자 지원방식

→ 돌봄 사업 상당수는 수가(현금) 중심 개인사업자

사회서비스 종류 구성(2018년)

지원방식		개수	비율	예산(십억 원)	비율
이용자 지원	바우처	22	9.2	10,338	29.0
	현금	63	26.3	13,421	37.6
	현물	25	10.4	5,582	15.7
공급자 지원	시설운영 지원	42	17.5	890	2.5
	사업단위 지원	46	19.2	1,940	5.4
	인건비 지원	26	10.8	3,103	8.7
	시설설비 지원	7	2.9	150	0.4
부하기의	이용가 미 고르가	0	0.0	0.0	0.0
기능		개수	비율	예산(십억 원)	비율
	아동돌봄(보육, 양육)	23	8.6	7,470,250	
	고용	41	15.2	2,415,523	
	성인돌봄	15	5.6	1,466,818	
	신체;건강	45	16.7	1,412,646	
	주거	13	5.2	703,562	
	일상생활지원	11	4.1	653,550	
	서비스 이용지원	16	6	474,005	
	문화여가	26	9.7	380,186	

3-3. 어떤 돌봄에 주목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 드러난, 취약한 돌봄

1. 집단거주시설

- 서로 붙어 있는 침상, 그곳에 묶여 있는 노인들과 기계적으로 투약하는 항정신성 의약품, 이 모든 것이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현실 (요양병원 실태: KBS, 2020. 10. 16)

2. 재가 돌봄

-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 방문서비스 중단과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의 공백은 생존권 위협)

3. 돌봄 가족

- 돌봄 공백으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 이탈, 돌봄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패널티와 지위 하락

돌봄 공백들...

코로나 초기 복지시설 집단감염

<표 3-2-2>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현황

최초발생일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확진자	입소인원
2020.02.20	경북	대남병원	의료기관(폐쇄병동)	120	
2020.02.21	서울	은평성모병원	의료기관(일반)	14	
2020.02.25	경북	밀알사랑의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7	30/30
2020.02.27	경북	서린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5	
2020.03.03	경북	참좋은재가센터	노인요양시설	18	
2020.03.04	경북	푸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68	
2020.03.04	대구	성보재활원	지적장애인거주시설	9	165/195
2020.03.05	경기	분당제생병원	의료기관(일반)	45	
2020.03.06	경북	제일실버타운	요양병원	17	
2020.03.19	경북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66	
2020.03.16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요양병원	128	
2020.03.16	대구	김신요양병원	요양병원	45	
2020.03.16	대구	배성병원	의료기관(폐쇄병동)	14	
2020.03.17	대구	수성요양병원	요양병원	4	
2020.03.18	대구	파티마병원	의료기관	37	
2020.03.19	경기	효사랑요양원	요양병원	25	
2020.03.26	대구	제2미주병원	의료기관(폐쇄병동)	196	
2020.03.19	대구	대실요양병원	요양병원	100	
2020.03.29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의료기관(일반)	68	

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였으며, 자료검색일(2020.05.26.)을 기준으로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된 최종 확진자 규모를 업데이트 함.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2. 돌봄의 쟁점: 사적 돌봄 체계

시설과 이용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현실?

사회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확대, 이용자 관리 체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급자 경쟁 환경이 고착화

사적 돌봄이 우세하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돌봄은 쉽게 공백에 빠짐 (가족에게 전가)

사적 돌봄 관계에서 이용자와 제공자는 각자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구조.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으로서 규범을 형성해야 할 필요

돌봄을 일부 집단에게 떠맡기는 방식 대신, 사회적으로 재조직화하는 돌봄(돌봄의 사회화)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돌봄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공급 단체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4-2. 돌봄의 쟁점: 사적 돌봄 체계



사회서비스로서 모호성: 누가 책임지는 사무인가?

사회서비스는 개념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어떤 사무가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

-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급여이지만, 수급권자와 보장기관이 법적 용어를 적용하거나 해당 사무를 이해하기 어려움
- 사회보장 사무에서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이용자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즉 정책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

사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도 사회서비스를 이해하고 적극적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은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는 교육대상자가 아님.
따라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지 못함**

Part 2. 공공 돌봄: 뉴딜이 필요하다



1. 정책 용어의 정리: 공공돌봄으로 사무의 명확화

공공 돌봄: 돌봄을 받을 권리,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권리

사회서비스 그리고 개별 사업들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사무를 두고 사회보장의 권리나 보장기관의 책임을 제시하기 어려움

-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지 못함.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전히 시혜적인 급여로 남아 있음
-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사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해야 함

'공공 돌봄'이라는 용어로 사회보장급여의 책임사무화

-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사무로 권리-책임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임. 즉 정부간 사무분담을 고려한 권리-책임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함
- 돌봄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립.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 돌봄의 경우 시군구 접수청구를 통해서 서비스 보장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각자 민간 및 영리 사업자에게 권리성 급여를 요구하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는 과제임

2. 공공돌봄이란

공공 돌봄: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 플랫폼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면, 개인과 지역 사회의 상호의존과 상호돌봄의 윤리는 사라지고, 저투자, 품질 저하, 그리고 무임승차가 발생함

- 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와 달리, 모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중요함
- 돌봄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 재화인 공유재임. 한정된 자원 하의 개인의 남용은 전체 구성원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집단 수준에서의 관리과 규제 등 집합행동이 필수적인 재화임

공공 돌봄이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인프라

- 공공 돌봄이란 공적 자원과 시설의 토대 위에, 지자체, 영리기업, 사회적경제, 개인과 가족 모두가 공동 생산하는 모델. 각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어야 함
- 모든 돌봄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고용할 수 없듯이, 돌봄의 참여자가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공공 돌봄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형성한 후 참여자들이 제각기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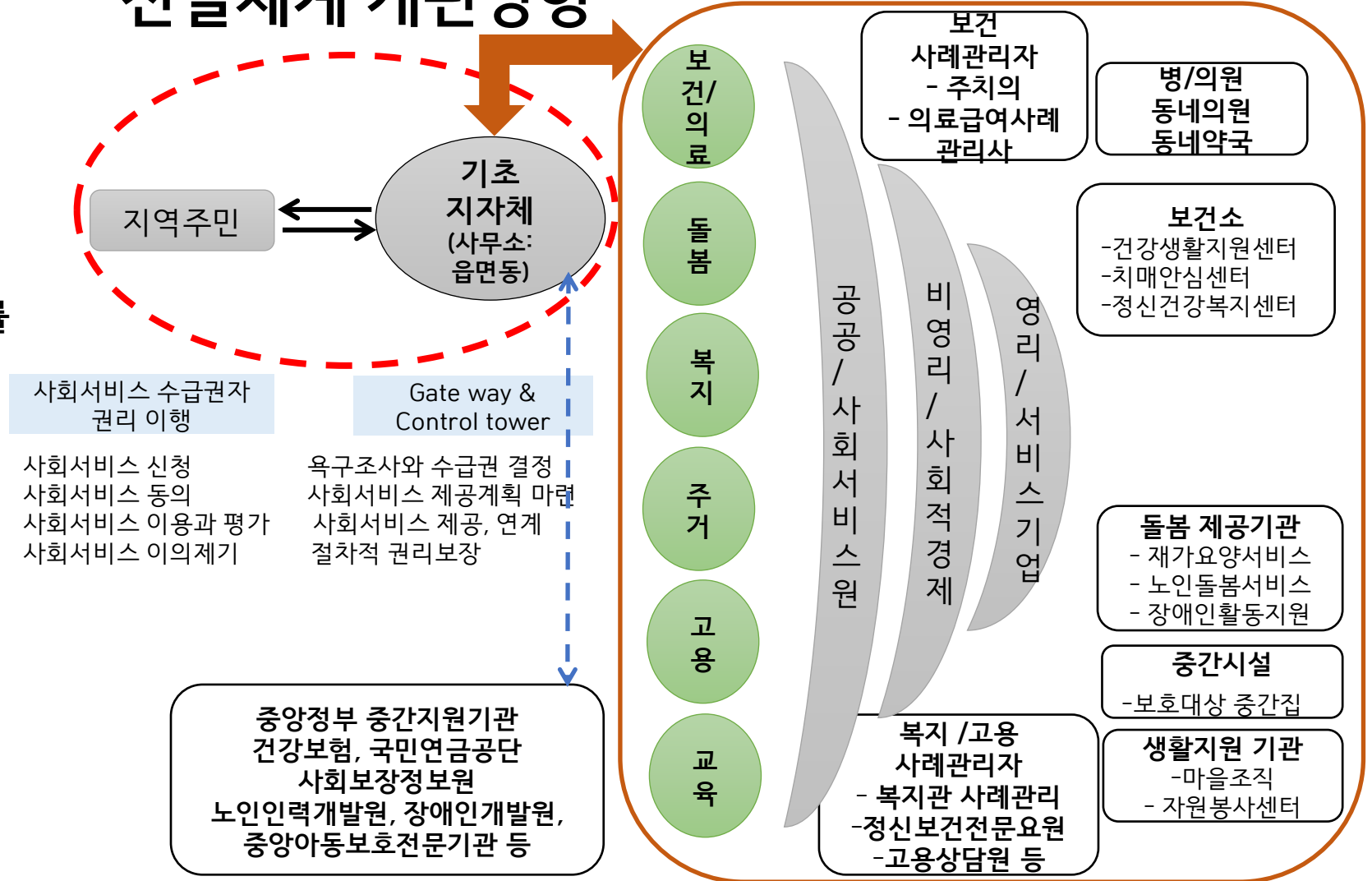
3. 공공 돌봄 전달체계

공공성의 모호성

공공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보장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책임을 지님

사무, 재정, 행정 분권의 문제
 - 포괄적 기능 이양 없이, 그 어느 수준의 정부도 돌봄의 총괄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없음
 - 돌봄 사업별로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 모두 정부간 관계가 뒤섞여 있어 독자적인 재량이 없음

전달체계 개편방향



4. 공공 돌봄의 우선순위

돌봄 인프라 투자

돌봄 뉴딜은 장기적 계획을 통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 대다수가 무임승차하는 체계는 지속되기 어려움
- 지역사회에 다양한 돌봄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돌봄을 조직하도록 해야 함
- 케어안심주택, 공공 요양원, 포괄지원센터, 서비스하우스, 학대피해자 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 생애주기 단계에서 모든 시민들이 돌봄의 수혜자가 되듯이, 돌봄의 책임도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유형 인프라가 되어야 함(와이파이 공유서비스와 같이)

필수 노동에 적절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돌봄 뉴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돌봄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미래사회의 핵심 의제로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중요함. 저임금 노동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필수 노동으로 보상해야 함. 적절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시해야 하는 것임

5-1. 공공인프라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확충 계획 무의미?

□ 연도별 인프라 확충계획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729	519	527	543	559	581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신축	510	102	102	102	102
		관리동 전환	1,125	225	225	225	225
		장기임대 등	615	123	123	123	123
	장기요양기관	344	69	69	69	69	68
재가 서비스	종합재가센터	135	-	8	24	40	63

구분		국·공립 시설	종합 재가센터	종사자 수	시설유형	민간시설 지원사업
서울	'19	5	4	55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20년 이후)	① 경영 컨설팅
	(~'22 목표)	20	25	3,900여명		
대구	'19	9	2	470여명	어린이집,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u>민관협력지원사업</u>
	(~'22 목표)	28	8	1,500여명		
경기	'19	10	2	33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인력수급지원
	(~'22 목표)	97	29	4,300여명		
경남	'19	7	2	39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u>커뮤니티케어 센터</u>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교육훈련지원
	(~'22 목표)	25	8	1,500여명		
계	'19	31	10	1,740명	-	-
	(~'22 목표)	170	70	11,200명		

5-2. 공공인프라 : 사회서비스원

실질적인 투자가 없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전환 및 확충은 미비

- 국공립 시설 위탁은 어디로?
- 종합재가센터와 국고보조사업 수탁조직으로 한정
- 국비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투자 어려움
- 민간과 비교하여 수익에서도 열악한 조건에 위치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주체의 하나일 뿐이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과제는 사회서비스원 자체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투자(SOC 국고보조, 돌봄뉴딜)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우선구매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

2020년 사회서비스원 운영실적

광역	총사 자수	사회서비스원 운영					
		국공립시설		종합재가		국고보조 위탁사업	
		시설수	총사자수	시설수	총사자수	시설수	총사자수
서울	437	8	102	12	957	-	-
대구	351	6	174	2	39	6	138
경남	475	7	121	2	42	5	312
경기	572	18	182	2	59	12	347

6.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누가 인프라 투자할 것인가? - 분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 공공성 확보라는 과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운영수탁 주체의 설립 자체보다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체의 인프라 투자(국고보조사업)가 더욱 절실한 것임이 입증됨
-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과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SOC 사업에 적용되듯이, 국고를 통한 인프라 투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병원과 같이 우선 민간이 기피하는 복합욕구나 긴급돌봄, 그리고 수익 구조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비정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
-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팬데믹 위기 속 필수적인 것임
- 공공의 직접 돌봄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이 해결할 수 없는 대상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표준운영모델(요양원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장애인 돌봄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Part 3. 공공 돌봄: 지역사회 공동체 플랫폼 관리책임자



1. Commons의 소멸



- Commons: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평민, 전체 공동체에 속하거나 영향을 주는 토지와 자원
- Common good: 공동선.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나 이익
- Commonwealth: 독립국가 또는 공동체, 주로 민주공화국을 의미 (구어=공동선)
- Public good: 공공재. 영리목적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현대의 복지국가는 Commonwealth

공동으로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적 행위를
조직한 단위로서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Public good을 확장 시킴
→ 공유가 아닌 시민권과 사회권의 도래

시장 소비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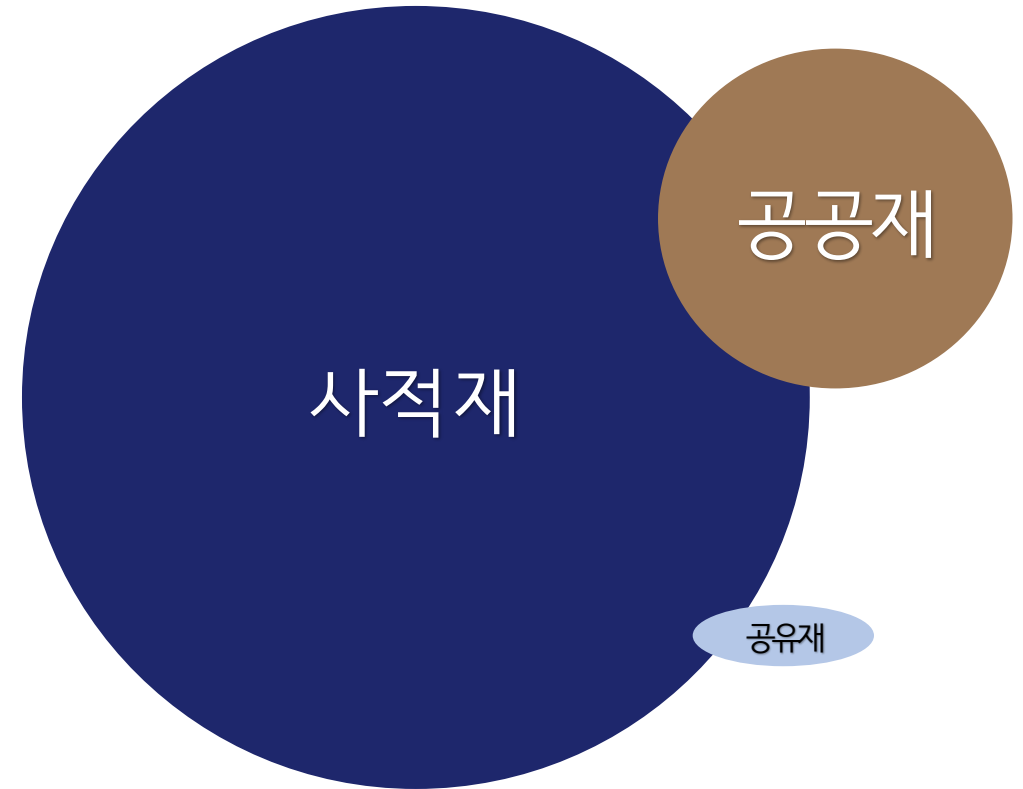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는 비시장 영역과
비공식 영역의 재화들을
시장 상품화함으로써 기능
→ 소비자 정체성의 확장과 소비 사회의 욕망

2-1. 포용은 누가 해야하나?

Different Types of Goods

	Excludable	Non-excludable
Rivalrous	Private goods food, clothing, cars, personal electronics	Common goods (Common-pool resources) fish stocks, timber, coal, national health service
Non-rivalrous	Club goods cinemas, private parks, satellite television	Public goods free-to-air television, national defense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재화의 종류는?



2-2. 포용은 누가 해야 하나?

재화는 시장-국가 순, 공동체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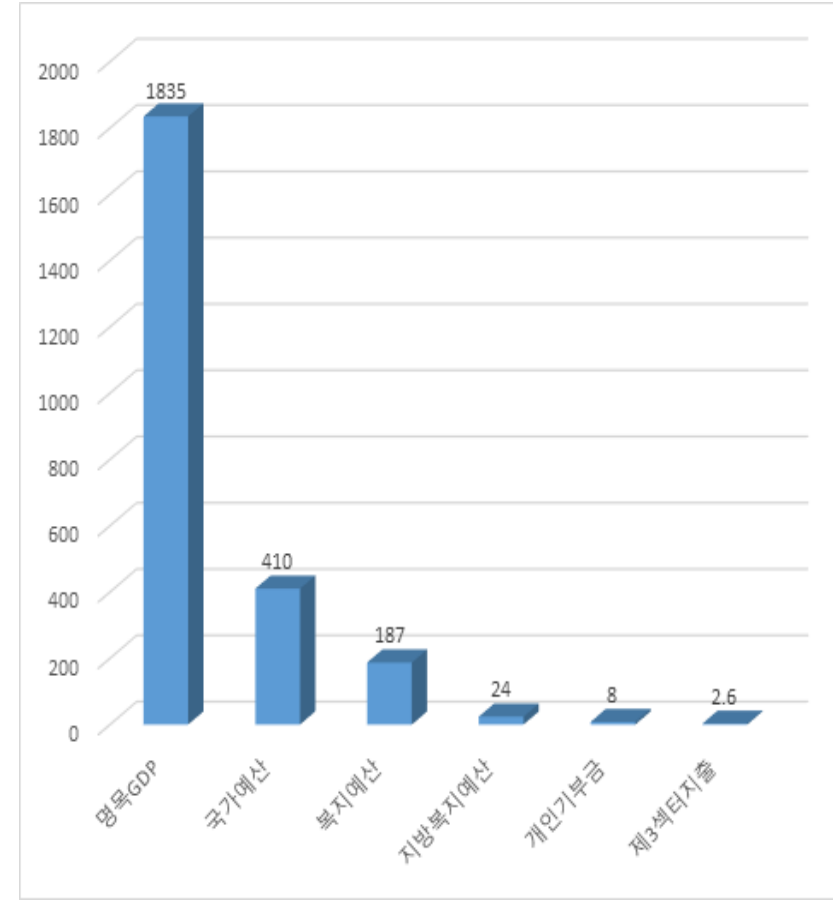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을 100%로 볼 때,
- 공공부문인 공공사회지출은 10.2%이며,
-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복지지출은 2%
- 기업을 제외한 자발적 민간 복지지출은 0.2%

2017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835조 원
국가결산은 재정수지 기준 총지출예산은 410조원
2017년 전국기준 복지지출 합계는 187조 원

- 사회보험 113조원
- 중앙정부 48조원
- 지방자치단체가 24조원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은 13조원

- 개인 기부금 신고금액은 8조원
- 법인 직원복리 제외한 제3섹터 기부금 2조6천 억원



3. 공동체의 역할- 집합행동의 딜레마 해결

죄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의 사회적 딜레마 해결

신뢰

사회적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선한 행동을 기대
- 정부신뢰가 중요: 복지국가와 신뢰의 상관

신뢰

상대가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믿음.
다른 선택의 이유가 없는 내시 균형

불평등과 신뢰

-평등은 효율성을 증대 시킴
: 핀란드의 생산성이 네 배
-신뢰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킴

상호강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규칙에 따라 응징하는 것.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 위한 자율적 약속.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바로 제도임

제도는 보상과 응징

무임승차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신뢰가 훼손됨. 그러나 공식적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사회규범이 효율적이거나, 비공식적 사회규범이 불충분하면 공식적 제도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함

상호성, 좋은 상대, 무자비 보복, 협동의 높은 보수,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집단의 크기, 경계의 명확화, 응징과 보상의 제도화 (오스트롬의 8가지 원칙들)

4-1. 모두를 믿지 않아도 된다. 중심 하나가 버티면 된다



누구의 신뢰부터 회복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는 것은? - 불신

한국사회 불신 1위 - 정부

믿을 수 있는 공공 조직부터 만들자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공무원이 있어야, 이들이 책임 사무를 펼쳐야, 주민들이 참여함

외국의 경우, 수많은 Self Help Group은 법적 제도적 그리고 책임지는 공공조직의 토양에서 형성됨

우리나라 현재 상태의 사회적 경제, 마을 조직은 지역사회 협동조합 성격이 약함

물론, 공공성과 신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공적 가치와 속성

그러나 사회자본은 공공 영역부터 시작

공공 돌봄 영역의 진입 관리가 필요함

- 돌봄 기관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고려해야 함. 돌봄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여 내부 통제가 가능하고 영리추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 설립 운영을 규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성은 적절한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신뢰적 관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임.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민간의 공급기관을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4-2. 모두를 믿지 않아도 된다. 중심 하나가 버티면 된다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자체 돌봄 전문인력의 확보

- 최일선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사례관리 전문인력(Generalist)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 서비스, 욕구사정, 커미셔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영리법인과 개인시설에 무리하게 공적 규제를 강제하기 어려움
- 계약 관리, 진입 관리의 필요성
- '좋은' 중간관리자 육성 필요
- 아무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문제 개선

돌봄에서 수요자 중심주의는 소비자 권리가 아님

- 수요자 중심주의를 선택권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은 자유시장과 같이 대안의 유무, 정보의 획득, 합리적 결정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임. 그러나 돌봄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함
- 수요자 중심주의는 사적 관계에서 구매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두의 권리와 책임인 집단적 규범에 따른 돌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임
- 타인에 의해 강제된 노동으로서 '돌봄' 지양
- 돌봄 윤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취약성에 대한 염려로부터 비로소 출발해야

구입하는 값싼 노동이 아니고, 온정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의존이 아니어야 한다면, 결국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달려있다

4-3. 모두를 믿지 않아도 된다. 중심 하나가 버티면 된다

돌봄 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국사업체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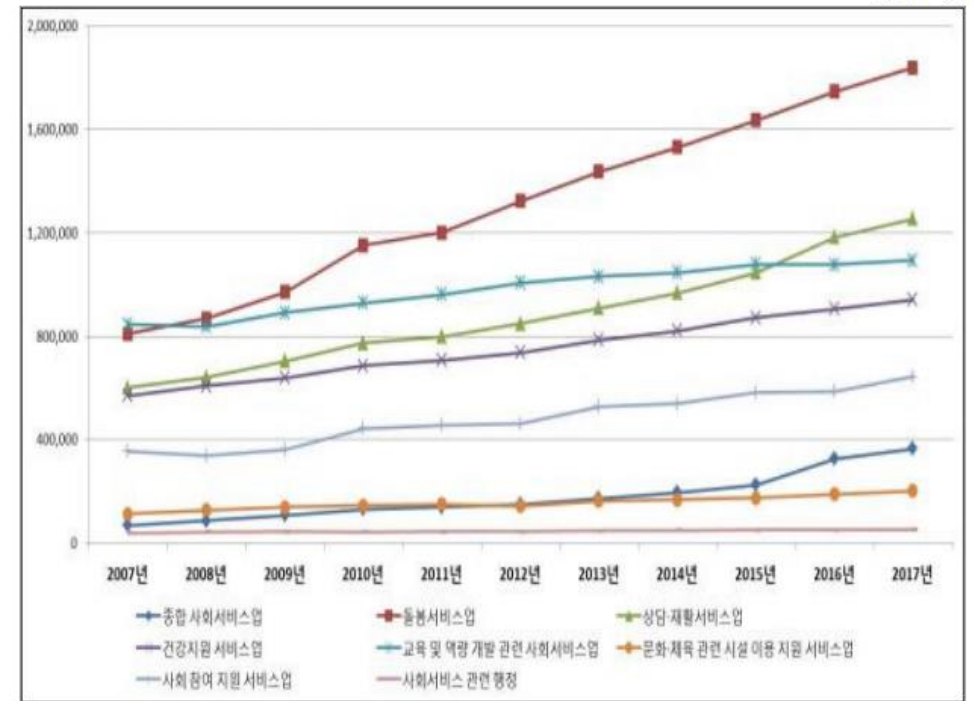
- 한국표준직업분류(KSIC)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2017년 기준 376만 명이며, 이 중 요양(코드 87111)과 보육(코드 87210) 등 돌봄서비스업이 184만 명을 차지(안수란 외, 2019)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만 살펴보면, 58,974개 시설에 568,912명(보건복지통계연보, 201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만 범주화할 경우, 일자리 수는 약 15만 개(김은하, 2017)

→ 돌봄 공공일자리의 필요

→ 조직과 인력에 형식적 공공성을 부여해야
(공공부문에 맞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2017년 기준)

(단위: 명)



주: 이 분석 결과는 KSIC의 9차 분류 코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데이터 파일]. 재분석.

4-4. 모두를 믿지 않아도 된다. 중심 하나가 버티면 된다



문제는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넋지이다

돈으로 거래되는 돌봄

- 전인적 관계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적 비합리성
 - 죄수의 딜레마 발생

신뢰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

- 돌봄에 대한 집합적 보상
- 돌봄 공동 생산
- 옴부즈만 제도와 투명성

캐슬린 보스(Vohs)실험 - 돈의 점화 효과

- 돈을 상기하면 개인 업무수행 능력은 향상되지만 대인관계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악화
- 실험 참가자 대기시간 동안
 - 실험군은 컴퓨터 화면에 돈 사진
 - 대조군은 컴퓨터 화면에 자연경관 사진
- 돈 사진에 노출되었던 참가자들은 이후 과제에서 남을 덜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원치 않음
- 돈에 촉각이 세워지면 이기적인 자기 충만감(self-sufficiency)이 생기는 것

돈과 관련한 것들에 둘러싸인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행동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돈보다는 상호 의무를 상기시키는 점화장치들을 통해 돌봄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5. 신뢰사회가 복지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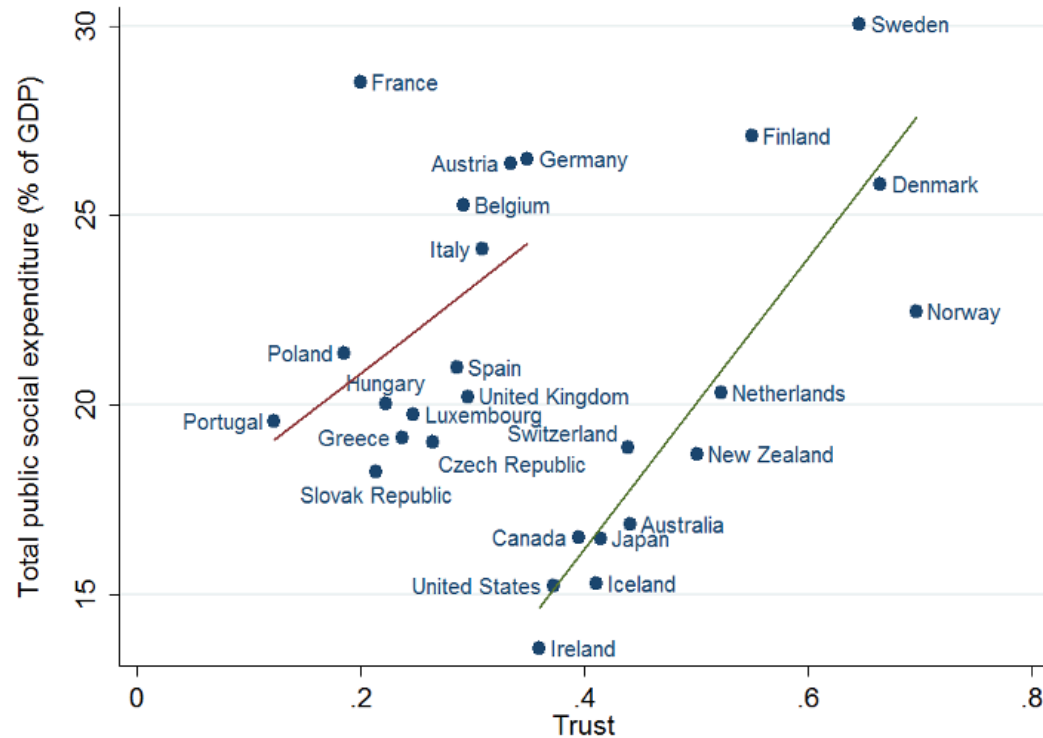


Trust creates a welfare state – not vice versa

February 29, 2012 - 06:35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cannot b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because the fundamental trust required for such a system to function is unique to the Nordic countries.

Most re
Jun. 12



[Trust and the Welfare State: the Twin Peaks Curve](#) (Algan, 2016)

6. 결론 - 원칙의 준수, 각자 잘 하기, 서로를 견제하기

국가의 역할: 사회권, 사회보장급여를 책임지기 (작지만, 알차게) - 공공 돌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을 보편적 사회보장급여로 재편
-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

시장의 역할: 생산과 분배를 투명하게 하기.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비영리 조직은

-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행위가 아님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과 보장기관의 계약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영역)
- 이기적 행위자로서 집합행동
- 국가와 시장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선적 역할
- 배제된 이들에 대한 포용, 소규모 집단의 권리 옹호, 그리고 새로운 혁신 투자가 민간 비영리 또는 제 3섹터가 가장 활동하기에 적합한 영역
-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구축하는 영역임

돌봄 공동체는 각 주체에 대한 신뢰 쌓기에서 출발

감사합니다

